

종합토론

사회자 :	박 양 춘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	유 근 배 (서울대학교 교수)
	장 보 응 (대한지리학 회장)
	조 정 제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최 창 조 (서울대학교 교수)
	허 우 증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번 분과에서는 앞 분과에서 미흡하게 다룬 것이나 국토의 재편성에 대한 제반 문제를 자유스럽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유근배 : 본인은 3분과 까지 발표를 해 주셨던 분들과 토론을 해 주셨던 분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국토발전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발의 측면보다는 보존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왔습니다. 본인은 장차 이루어질 지구 환경에 대해서 낙관론 보다는 비관론에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균형 발전을 말씀해 오셨고 그 대책을 말씀해 오셨는데 저는 얘기하고 있는 발전, 그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의 개념이 이루어진 배경은 동양, 혹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약 3세기 동안 비정상적인 풍요를 구가했던 서구 선진국가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고 이상이었습니니다. 발전이란 척도도 역시 그 사람의 풍토와 문화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발전의 지표로 삼았던 것들이 시장가격구조에서 비롯한 GNP 개념이고, 개발의 바탕이 되는 환경을 보는 눈 마저도 시장 가격의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시장가격의 메카니즘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배이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향유하고 있는 이 환경은 수십년, 수백년 후 우리의 후손도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율로 계산해 볼때 후손이 향유해야 할 만족도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무시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폭증하고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결핍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여러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고갈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발전 자체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발전이나' 하는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누히 말씀을 하셨지만 양이나 질이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케넷 볼딩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환경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총량적인 성장 GNP의 증가가 지상과제가 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GNP의 성장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토 파손 속도가 빠른 것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공해를 줄이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공해를 일으키는 것도 GNP를 증가시키고 공해를 없애는 것도 GNP를 증가시키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발전 척도, 스케일을 재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여러분께서 작다고 말씀하셨고 또 넓게 쓰는 방법도 얘기하셨습니다. 류우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의 조사도 완전히 되어있지 않고 더욱이 국토정보의 파악이 부정확한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발전 개념의 재고와 더불어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원 재평가, 즉 이컬리지칼 인벤토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다른 분들에게서 말씀하신 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그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가격 구조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거나 무시되어 왔던 자연 환경이 심도있게 반영되어 발전에 대한 균형있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창조 : ‘국토 구조의 재편성’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광대무비하여 짧은 시간내에 얘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발표에서 드러난 현재 국토의 문제점은 대도시 과밀 지역격차의 심화, 촌락의 피폐 3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토 공간의 의복(옷)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와 물, 토양의 악화, 즉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별 우려가 없어 의외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국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인지 먼저 밝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철학 문제는 앞에서 상향식 또는 하향식 논리로 전개되었지만, 본인은 이것을 철학이 아닌 일종의 전략이란 개념으로 이해함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목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개발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점을 심각히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국토, 즉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태도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땅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상물, 즉 인간에게 종속되어 자의적으로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개발과 보존을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개발식 보존’, 말하자면 보존조차도 개발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 봅니다. 땅은 인간을 있게 한 근원이고, 하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땅은 어머니요 하늘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국토는 유기체라는 땅에 대한 사고방식이 선행된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근원과 원천과 본질을 해치지 않는 국토의 재구성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땅과 하늘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즉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간과 하늘과 땅이 한몸 한마음이란 의식을 가지고 보다 잘 살기 위한 개발을 진행해 간다면, 보존은 자연히 개발 자체에 융합

될 것입니다. 요컨대 땅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기도, 천지 만물도 다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체를 사실상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뚜렷한 대안제시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우금 : 앞의 세분과에 걸쳐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깊숙하게 또는 슬쩍 다루고 넘어간 2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작게는 지리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는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토의 재편성’입니다. 그 편성의 중요한 항목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게 발전해 나아가는 데에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필연코 거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의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것은 얼마 전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곧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 지방자치제와 관련되어 여러가지 오해와 시비가 있었던 점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말하자면, 가까운 장래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으로 약속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를 지연시키려 하는 술책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 발언을 삼가하는 듯 싶습니다. 아뭏든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한 지역 감정의 해소 차원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체계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과 통신부문에서의 급격한 발전으로 시간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기에 현재는 종래에 유지되어 오던 체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분야는 道와 같이 큰 단위가 아닌 보다 하위계층의 읍면 행정단위를 어떻게 변화해가는 사회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근래에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간 소홀했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입니다. 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보전을 어느 차원까지 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학계에서나 국민 전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환경의 파괴, 오염, 공해 문제를 해결 혹은 방지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욕심을 부리자면 한이 없고, 환경보존의 기준을 높여 요구를 많이 할수록 그 나름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동떨어지는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서 공업을 발전시킬 때 흔히 값싼 노동력의 잇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 외에도 낮은 폐기물 처리기준으로 인해 공해방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가

능케 한 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지방에서도 널리 거론되고 있는데 일례로 여름에 답사를 갔다 어느 군 군청에서 들은 논쟁을 소개합니다. 공장이 거의 없던 그 군에 농공지구가 조성되어 부분적으로 업체가 들어 왔는데 환경청에서 조사를 나와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군청 관리들의 입장에서 결국 그것은 농공단지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과 같음을 의미했기에 대단히 반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의 유일한 세금 수입원인 몇 안되는 공장에 높은 수준의 환경처리시설을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이 각 지방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답을 얻는다고 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할 것인가가 합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보웅 :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대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우리 고장에서 경험적으로 느낀 바를 강론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공업단지가 크게 셋으로 구성됩니다. 광주의 하남공업단지, 여천과 광양만의 공업단지, 앞으로 조성될 목포 인근의 대불공업단지가 그것입니다. 우선 목포에 있는 대불공업단지의 경우 정부에서는 굉장한 선전을 합니다. 그 공업단지의 부지는 원래 영산강 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농지용 간척지였습니다. 그것이 작년 선거기간을 통하여 공업단지로 용도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선거때 대대적 선전과 입후보자들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대규모의 심포지움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서해안 시대와 대불공업단지’란 주제하에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보기좋은 청사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약 사업은 곧 실천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대불공업단지 기반 조성에 실제 책정된 예산은 4억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 기초작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불공업단지에 실지로 언제 공장이 세워지고 가동되어 지역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대불공업단지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볼 때 서남단에 위치한 대불공업단지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가 개발되면 농촌 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 상해와 일본 나가사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개발만 되고 이를 잘 이용하면 중국, 일본과의 무역에도 유리하고 동남아시아로의 진출도 쉽습니다. 낙후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천·광양만 공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전라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에서도 우수한 중화학공업단지입니다. 각종의 화학공장이 들어서 있고 광양에는 한국 제2의 제철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곳에서 생산액은 많을지 모르나 공단의 존재가 경제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천 화학공업단지를 보면 시설이 전부 자동화되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제4공화국때 전남대학에 화공학과를 특설학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한해 약 100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여천 공업단지로의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업생들은 진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공학과와 입학정원은 크게 줄고 특수성은 상실되었습니다. 여천 공단의 문제점은 공해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 농작물, 어업 등의 피해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을 고려 않고 생산성만을 생각한 부작용입니다. 제철소 건설에 따른 광양에서의 땅투기, 땅값의 앙등이나 대규모 골프장 조성이 예정된 승주군에서의 지가상승 등도 공업화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업단지 조성시에는 그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끝으로 광주 서북쪽에 있는 하남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부지는 100만평입니다. 20년 전에 광천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계공업단지가 입지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남공업단지로 이전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공장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0만평을 목표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공업분야에서 후진지역인 전라남도에서는 선진지역의 병폐를 거울삼아 공해발생이 비교적 적은 업체를 선택적으로 유치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기계공업과 그의 전자공업 등 대부분 공해가 적은 공장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남공업단지는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여천, 광야만 일대의 중공업단지 다음가는 제2의 공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조정제 : 앞 분과에서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는 중복됨이 없이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류우익 교수님의 발표는 전반적으로 시사성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낙후지역의 분포를 하나의 물음표로 정형화 한 것을 지도를 떠올려 따라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단순화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음표가 지나가는 지역외에 충청도 청양지역 등도 낙후지역입니다. 또 경남 서부지역과 제주도 물음표가 찍히는 지점인데 그곳이 낙후지역인지 의문입니다.

세분의 발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각을 너무 현시점에 두어 지역의 형평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듯 싶습니다. 마치 그간 추진한 개발정책이 모두 잘못되었고 진작부터 형평성 중심의 개발이 있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비칩니다. 본인은 초기에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한된 지역에서의 집중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에 집적 이익을 바탕으로 광역개발 한다는 전략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광역개발을 통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균형 개발을 할 때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과거 현실을 무시한 채, 개발 정책에 있어 형평성이 희생되어 왔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컨대 새마을 공장과 농공지구의 여건변화를 브라운 교수가 이용했던 효율성 엔트로피와 지역 형평성 엔트로피 분석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새마을 공장이 1973년도에 시작되었고 농공지구는 꼭 10년 후인 1983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의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10년 뒤에 오히려 효율성이 올라가고 아울러 지역간 형평성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희생되는데, 10년이란 기간 후엔 효율성도 향상되고 지역간 불균형도 동시에 해소된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효율성을 중시하여 집적 이익을 추구한 다음 본격적인 균형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도 향상시키면서 균형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건 변화를 보면 교통망을 통한 접근도 향상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농공지구까지의 시간거리 단축을 검토하면, 새마을 공장도 농공지구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전에 54분 걸리던 것이 10년 후에 27분으로 50% 절감되었습니다. 도시까지는 33분 걸리던 것이 20분으로 40% 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도의 향상으로 지역동질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도 이후 이루어진 지역 동질화에 큰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지역동질화가 전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입주가 용이하게 되는 것은 이런 동질화 경향 외에도 땅값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 성장한 지역에서는 땅값이 매우 높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땅값이 매우 쌉니다. 기개발된 지역은 환경요소를 매우 중요시 하는 반면에, 전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소의 환경을 희생하고라도 업체 설립을 강력히 회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앞으로의 기업 지방입주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균형개발을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장하는 것의 하나가 'small is powerful'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동질화 경향외에 국토가 작음으로서 오는 여러가지 잇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기업이 잘못 입지하는데서 오는 입지의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국토가 작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점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국토개발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가 작을수록 국토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생각하고 싱가포르 같이 국토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국토를 넓게 쓰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땅을 많이 쓰는 기업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들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우리 국토에는 환경오염이 적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한정 육성하는 식의 전략을 펴 국토를 아껴야 할 것입니다. 국토를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공업개발, 국토개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에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업입지 전략을 보면, 공업을 지방이전 시키는데 정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간 연구소, 정보처리업 등을 지방이전시켜 공업에 못지 않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업의 지방이전에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테크놀로리스에 대한 열

망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불도우저식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대학이라든가 지방연구소, 정보처리기능 등이 성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테크노폴리스가 자연히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 입니다.

박영한 : 심포지움 주제에 들어 있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를 성장에 포함시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 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발전으로 인정하는 한국사회가 국토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국토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구조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집중이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그 집중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의 발표와 토론에서 ‘국토발전’ 또는 ‘국가발전’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발전을 어떤 공간적인 상호작용의 증대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국토구조는 ‘단선구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위 ‘복선구조적’인 국토의 재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에 처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최교수의 지적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같이 들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살기 좋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철학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하고 그 개발을 합리적으로 관장하며 그 부산물로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미리 예상해서 국토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구조의 재편성 방법으로 제기된 상향식 접근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김인 교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용이란 측면에서 ‘동시다원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개발원의 조박사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집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형평있게 조절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그 점에선 두분이 일치하였다고 봅니다. 소위 하향식 접근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상위계층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체 성장효과를 하위계층으로 파급시키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수에 의한 지배, 획일적 성향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수가 참석하고 다양성을 가지며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즉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 상향식 개발의 근본적인 철학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

면 이와같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개발방식을 우리 국토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한편, 개발 자체가 국토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